 기획재정부		보도참고자료	
보도일시	2019. 10. 30(수) 06:00	배포일시	2019. 10. 29.(화) 13:3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김정홍 (044-215-4420)	담당자	김성수 사무관(044-215-4424)

디지털세 국제 논의 최근 동향

1 디지털세 논의 추진경과

- OECD/G20는 130여 개국이 참여하는 BEPS이행체계를 통해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조세문제* 해결방안을 논의 중(15~)

* Base Erosion & Profit Shifting(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회피) Action 1(제1과제)

- 디지털경제는 ① 사업장 없이 수익실현이 가능하고, ② 무형자산 의존도가 높으며, ③ 데이터 및 사용자 참여가 가치창출에 기여한다는 특징을 가짐(18.3월)

① 구글 등 다국적 IT기업은 물리적 사업장을 시장소재지에 두지 않아 시장소재지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가 어려운 “가치창출과 과세권 배분의 불일치”를 야기하고,

② 무형자산을 저세율국으로 이전한 후 시장소재지에서 로열티 등 무형자산 사용비용을 지급하여 시장소재지의 세원을 잠식하는 “공격적 조세회피” 문제를 심화

⇒ OECD/G20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새로운 과세권 배분원칙 및 세원잠식방지 방안을 2020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

-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으로 영국, 미국, G24(개도국협의체), 독일·프랑스에서 4가지 제안서를 제출(18.12월)

⇒ 크게 2가지 접근법(2 Pillar approach)으로 추진

① (Pillar 1) 새로운 이익배분 기준 및 연계성(nexus) 도입

- ① 사용자 참여 접근법: 사용자 참여를 통해 창출된 가치는 사용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, 소셜미디어, 검색엔진, 온라인마켓등 특정 디지털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초과이익(non-routine profit)에서 사용자창출가치를 계산하여 배분
- ② 마케팅 무형자산 접근법: 브랜드 가치 등 마케팅 무형자산은 시장관할권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논리로, 초과이익(non-routine profit)에서 마케팅 무형자산가치를 계산하여 배분
- ③ 중요한 경제적 실재성 개념 도입: 사용자와의 지속적인 디지털 상호작용 등 중요한 경제적 실재가 있는 경우 고정사업장·과세권을 인정,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총이익을 배분

- ② (Pillar 2) Pillar 1으로 해결되지 않는 조세회피 문제 방지를 위해 국외 소득에 대해 일정세율 이상으로 과세하는 글로벌 최저한세를 도입하는 등 세원잠식 방지규정을 도입

- OECD사무국은 시장소재지 과세권 강화 등 Pillar 1에서 제안된 3개안의 공통점에 기반한 「통합접근법(Unified Approach)」 제안(10월9일)

- * 주요 원칙 :
- ① 시장 소재지 과세권 강화
 - ② 물리적 실재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연계 기준
 - ③ 기존 독립기업원칙 수정
 - ④ 단순성·조세 확실성 추구

- **(적용범위)** 디지털 기업 외에도 광범위한 **소비자 대상 사업***(consumer facing business)으로 **확대**하여 제안

* 기업·소비자 간 거래(B2C)는 기본적으로 포함하여 세부 적용 범위 논의 예정

- **(대상업종)** 휴대폰, 가전, 자동차 등 **제조업을 포함하여 소비자대상 사업**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적용

- 금융업, 1차 산업(commodities), 광업 등 일부 산업은 제외(carve-outs)를 검토 중

- **(기업규모)** 전세계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수준(threshold) 이상의 다국적기업에 적용

- **(연계점)** 물리적 실재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**시장소재지 내 매출** 등에 근거하여 과세권을 인정하는 새로운 **연계성 기준**(new nexus rule)을 제안

* OECD 모델 조세조약 등 기존 국제조세 규범의 고정된 사업장소 등 물리적 실재(physical presence)와 다른 새로운 기준

- 다국적기업의 **시장소재지국 내 매출이 일정 금액**(revenue threshold)을 **초과**할 경우 다국적기업의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그 국가에 **과세권**을 부여

- **(이익배분 방법)** 다국적기업(MNE) 그룹의 이익 중에서 **시장소재지국에 배분 가능한 이익을 3가지 종류**(Amount A, B, C)로 구분

- ① **(Amount A: 초과이익 배분)**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이익 중 통상적인 이익을 넘어서는 **초과 이익**(above normal profit) 중

- **시장에서 창출한 가치** 부분을 공식에 의해 산출하여 시장소재지국 별 **매출에 따라 배분** ⇨ 새로운 과세권(New Taxing Right)



※ **초과이익 배분 예시** (구체적인 안은 미확정)

- (가정) ① 다국적기업 X의 글로벌 영업이익률 20%,
② 통상이윤율을 10%로 합의(나머지는 초과이익)
③ 초과이익 중 시장에 배분하는 비율을 20%로 합의
④ 시장소재지국별 매출

국가	1	2	3	4	5
매출	4,000	6,000	500	1,500	3,000

⑤ 연계성 기준은 해당 시장 매출 1000이상

- (적용례) ① 글로벌기업 X의 초과이익(Y%): 매출의 10%(=20%-10%)
② 시장 소재지국 배분 이익(W%): 매출의 2%(10%의 20%)
③ 소재지국별 과세가능 초과이익 배분액(A)

국가	1	2	3	4	5
매출	4,000	6,000	500	1,500	3,000
W%	2%	2%	2%	2%	2%
Amount A	80	120	No Nexus	30	60

② (Amount B: 기본기능 보상) 시장 소재지국 자회사 등에서 수행하는 기본적인 마케팅·판매 활동(baseline activities)에 대해 고정된 이익률(fixed return)로 보상

③ (Amount C: 추가기능 보상) Amount B가 적용되는 기본 기능을 넘어 시장소재지에서 수행된 특별한 기능(예: 제조 등)이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보상(정상가격기준 적용)

<통합접근법 예시>

□ 주요 가정

- 스트리밍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(MNE) 그룹 X는 시장 평균과 경쟁업체의 초과이익을 넘어서는 높은 초과이익을 창출
- (국가 1: 모회사 거주지국) P Co는 X의 최종모회사로, 스트리밍 사업에 사용되는 무형자산을 소유하여 X의 모든 초과이익을 획득
- (국가 2 : 자회사 거주지국) S Co는 P Co의 자회사로, X의 스트리밍 서비스의 마케팅과 판매를 맡고, 국가2의 소비자에게 스트리밍 서비스 직접 제공
- (국가 3: 시장소재지국) S Co는 국가3의 소비자에게 물리적 실재 없이 원격으로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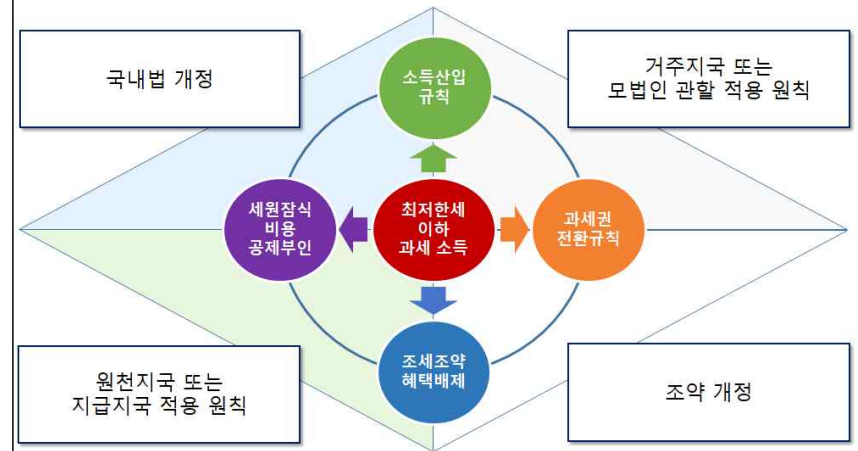
□ 적용 결과

	현행 기준	통합 접근법
국가 1 P Co	· 통상이익 + 무형자산보유에 따른 비통상이익	· 초과이익 일부에 대한 과세권 이전 (→ 국가 2, 3)
국가 2 고객 S Co	· 판매기능에 대한 통상 이익 (이전가격세제)	· Amount A + Amount B (+ Amount C)
국가 3 고객	· 과세권 없음	· Amount A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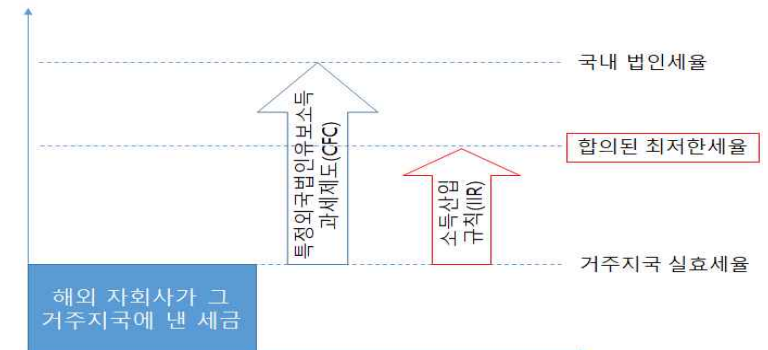
- 1) Amount A : 그룹 정상초과이익(above normal profit)의 일정부분 배분
- 2) Amount B : S Co 기본기능(baseline activities)에 대한 고정보상
- 3) Amount C : S Co 추가기능에 대해 추가로 이익배분

3 Pillar 2 : 글로벌 최저한세*

* Global Anti-Base Erosion Proposal 또는 Global Minimum Tax



① (소득산입규칙) 해외 자회사 소득이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 되는 경우 최저한세율까지의 소득을 모회사 과세소득에 포함하여 과세(Income Inclusion rule)



② (세원잠식비용 공제부인)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된 금액이 비과세·저율과세되는 경우 지급인의 거주지국에서 그 비용공제를 부인(Undertaxed Payments Rule)

- ③ **(과세권 전환규칙)** 조세조약상 국외원천소득(이자·배당 등)에 대해 그 소득을 받는 자의 거주지국에서 면세(exemption)하고,
- 그 소득의 원천지국에서도 비과세·저율과세될 경우 이중 비과세 문제 발생
- ⇒ 그 과세권을 거주지국으로 전환시켜 과세하고 원천지국에서 납부된 세액은 세액공제(credit) 적용(Switch-over rule)
- ④ **(조세조약 혜택 배제)** 거주지국에서 최저한세 이하로 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조세조약 혜택 부인(subject to tax rule)

4 | 영향 분석(Impact Assessment)

- 디지털세 설계에 따라 기업뿐만 아니라 법인세수의 증가 또는 감소 등 국가 간 과세권에 일정한 영향 불가피
- ⇒ OECD 사무국 중심으로 디지털세의 경제·세수 효과에 대해 시나리오 별로 분석 작업이 진행 중, 금년 말 경 발표 예정

5 | 향후 계획

- 기획재정부, 국세청, 조세재정연구원, 관련 기업을 포함한 민관 TF를 수시로 운영
- 민·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OECD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
 - OECD 사무국이 제안한 「단일접근법」이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, 세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

□ 향후 일정(안)

- **(Pillar 1 공청회)** 11.21~22일, OECD센터(파리)
 - **(Pillar 2 공청회)** 12.13일, OECD센터(파리)
 - **(IF* 총회)** '20년 1.29~30일
- * (Inclusive Framework) OECD/G20 BEPS 프로젝트(15개 과제)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의체(약 130여 개 국 참여)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참고1

디지털세 관련 Q&A

① 영국, 프랑스 등과 유사한 단기대책을 도입하지 않는 이유?

☞ 디지털기업에 매출액에 기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단기대책을 도입할 경우 WTO 비차별원칙에 따라 내외국법인에 대해 차별 없이 적용해야 하므로 **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에 더하여 중복 과세되는 문제**

* EU의 경우 매출규모가 큰 IT기업이 거의 없어 우리나라와 달리 중복 과세 우려가 적음

☞ 프랑스가 디지털세를 도입할 당시 미 무역대표부가 1974년 통상법(Trade Act) 제301조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적 통상조치 인지 여부를 조사한 것과 같이 **미국과의 국제통상·조세분쟁을 유발할 수 있음**

☞ '19년 3월 EU경제재정이사회(ECOFIN)에서 EU차원에서 단기대책 도입을 논의하였으나 아일랜드, 스웨덴, 덴마크, 핀란드 등 **북유럽 회원국**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, 자국내 다국적IT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여 **반대함**에 따라 **사실상 무산된 적이 있어 국제적으로 지지가 부족한 제도**

☞ 매출액 기반 과세로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법인세 과세원칙과 배치되며, 사업자는 디지털세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쉽고 부가가치세와 중복하여 과세되는 측면

② '20년까지 디지털세 합의 가능성에 대한 견해?

☞ 국가간 과세권 배분 문제가 걸려있어 합의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나, G20/OECD 중심으로 합의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기반으로 실무작업을 추진 중이므로 어느 정도 실질적인 결과 기대

참고2

EU 단기대책(디지털 서비스세) 주요 동향

□ (EU) '19.3월, EU경제재정이사회(ECOFIN)에서 단기대책 도입을 위한 **EU차원의 합의 실패**(사실상 무산)

○ 일부 북유럽 회원국*들은 미국과의 통상마찰, 자국내 다국적 IT기업 철수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우려하여 반대

* 아일랜드, 스웨덴, 덴마크, 핀란드 등

□ (개별국가) EU차원의 합의와 별개로 **영국, 프랑스, 이탈리아, 스페인** 등 EU 주요국에서 독자적으로 DST 도입 추진 중

< EU국가별 DST 주요 내용 및 동향 >

구분	세율	매출기준 (thresholds)	시행일	비고
영국	2%	(全世界매출) £5억 ↑ (국내매출) £2,500만 ↑	'20.4월	- 이해관계자 의견수렴(~'19.2월) - '19.7월,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수정안 공개
프랑스	3%	(全世界매출) €7.5억 ↑ (국내매출) €2,500만 ↑	'19.1.1	- '19.3월, 의회에 법안 제출 - '19.4월, 하원 1차 통과 - '19.5월, 상원 1차 통과(수정 : 3년간 한시도입) - '19.7월, 상·하원 최종 의결
이탈리아	3%	(全世界매출) €7.5억 ↑ (국내매출) €550만 ↑	'20.1.1	- '19.1.1. 법 제정 - 시행일 연기 - '19.10월 시행령 제정
스페인	3%	(全世界매출) €7.5억 ↑ (국내매출) €300만 ↑	미정	- DST법안 국회제출('18.10월) - DST수정법안 제출('19.1.25) - DST법안 국회에서 부결('19.2.13), 선거(4.28) 이후 재회부 가능성
EU집행위	3%	(全世界매출) €7.5억 ↑ (EU내매출) €5,000만 ↑	'20년	- '18.3월 발표